민주, 단체장·지방의원 하위 20% '페널티'

내년 6월 지방선거 앞 업무평가…광주·전남 물갈이 신호탄

공천심사·경선 2중으로 각 10% 감점…현역 불이익 불가피

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광역·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에 대한 업무 평가를 통해 하위 20%에 포함되는 현역에 대해서는 공천 과정에 감점 '페널티'를 도입키로 했다.

이는 현역 단체장 및 지방의원이 상당수를 이루는 광주·전남지역에 대한 '물갈이'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의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평가 시행 시책에 따르면 중앙당과 각 시·도당에 구성된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하위 20%에 포함된 단체장 및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공천심사 과정과 경선에서 본인의 얻은 점수와 득표수에서 각각 10%씩을 감산하기로 했다.

중앙당은 광역단체장을, 시·도당은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을 평가하게 된다.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최근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조만간 현역들에 대한 평가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현재 17개 시·도지사 중 민주당 소속이 8명인 점을 감안하면 하위 20%에 해당되는 1명 정도가 페널티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전 전남지사가 총리로 영전함에 따라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윤장현 광주시장만이 평가 대상에 해당되면서 페널티를 받을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인구 50만명 이상과 50만명 이하 시, 구청, 자치구 등 4개로 분류해 전국 단위로 하위 20%를 가려낸다.

전남의 경우 50만명 이하 지자체인 여수시장과 순천시장, 나주시장은 다른 지역 시장들과 하위 20% 경쟁을 벌인다. 광주 4명의 구청장도 같은 방식으로 민주당 소속 전국 구청장들과 경쟁한다.

3선 단체장을 포함해 민주당 소속 11명의 군수도 다른 지역 군수들과 경쟁해 하위 20%에 포함될 경우 10% 감점을 받게 된다.

다만, 지방의원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상대 평가를 하기 때문에 광주의 경우 12명의 시의원 중 2명이 무조건 10% 감점 대상이 된다. 전남은 29명의 도의원 중 5명이 해당된다. 사실상 광주·전남지역 지방의원들 평가 결과 하위 20%는 물갈이 대상이 되는 셈이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서 현역 자치단체장이 광역단체장으로, 지방의원이 자치단체장으로 체급을 높여 출마를 하더라도 현역 평가 결과 하위 20%에 해당될 경우 공심위와 경선에서 그대로 각각 10%씩의 감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하위 20%에 포함되는 현역들은 공천심사와 경선과정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대적으로 정치신인 또는 여성, 청년, 장애인 후보 등은 최소 10%에서 최대 25%까지의 가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천심사와 경선과정에서 10% 감점이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당 관계자는 "현역 프리미엄에 밀려 참신하고 유능한 신인들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요소를 없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선별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광역·기초단체장의 평가기준과 방법은 1000점 만점에 ▲직무활동 350점 ▲공약이행평가 200점 ▲여론조사 300점 ▲자치분권 활동 150점 등이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朴 제명' 오늘 매듭

한국당 최고위 개최

자유한국당이 오는 3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명 문제를 매듭지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홍준표 대표와 친박(친박근혜)계가 숨가쁜 하루를 보냈다.

한국당은 애초 1일 최고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이유로 3일로 일정을 연기했다. 이틀이라는 시간을 번 홍 대표와 친박계는 저마다 당내 의원들과 스킨십을 늘리며 개별적인 설득 작업에 나섰다.

홍 대표는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최고위원들과 오찬을 하고, 저녁에는 초선의원들과 만찬 가졌다. 2일에는 재선·3선 의원들과의 식사계획도 잡았다.

현재 한국당 내에서는 박 전 대통령 제명과 서청원·최경환 의원의 제명 조치에 대한 당헌당규 해석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홍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박 전 대통령의 제명 결정은 이미 윤리위원회에서 결론을 낸 사안이기 때문에 최고위에서 보고만 받으면 끝이라는 입장이지만, 친박계는 당내 반발이 있는 만큼 최고위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홍 대표는 최고위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지난주 방미 성과에 대한 설명을 주로 하면서 "앞으로 당내 문제는 최고위원들과 협의해 나가겠다"고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초·재선 의원들도 이날 각각 모임을 갖고 박 전 대통령 출당과 서·최 의원 제명 조치 등 당의 진로에 대해 논의했지만 통일된 입장을 마련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한국당 초선의원 회의 자유한국당 초선의원들이 1일 오후 국회 당 정책위의장실에서 모임을 하고 당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분당 초읽기 바른정당 '통합전대론' 변수 부상

자강파 제안에 통합파 일부 호응…유승민·한국당은 난색

바른정당 보수통합파의 탈당 움직임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전당대회론이 막판 변수로 부상하고 있어 주목된다.

통합 전대론은 자강파 일각에서 제기됐고, 남경필 경기지사가 신호탄을 쐈다. 남 지사는 1일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통합 전당대회를 제안한다"면서 "재창당을 위한 통합 전대가 원칙 있는 통합, 제대로 된 통합"이라고 말했다.

김세연 정책위 의장, 바른정당 초대 대표를 지낸 정병국 의원도 이 같은 통합 전대론에 힘을 실었다. 바른정당의 분열을 택하는 대신 통합 전대를 고리로 보수 통합을 이루자는 것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연석회의에서 "바른정당이 주도해 보수 통합 프레임을 설정하고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면서 "통합 전대를 통해 보수대통합의 주도권을 쥐고 대등한 입장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한국당이 바른정당발(發) 통합 전대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논의 과정에 들어간다면 현재 진행 중인 11·13 전당대회를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당의 최대주주이자 자강파의 대표 격인 유승민 의원이 통합 전대론에 난색을 보여 현실화 여부는 불투명하다.

11·13 전대에서 당 대표 선출이 유력시되는 유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계획대로 (11·13 전대를) 치러야 한다"며 "원칙대로 해야 하고 바꿀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하태경·진수희·권오을 등 다른 최고위원들도 한국당과의 통합에 극렬히 반대하고 있어 통합 전대론은 향후 자강파 내분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자유한국당 내에서 바른정당과의 당 대 당 통합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에서 통합전대론이 힘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런 가운데 바른정당과의 정책·선거연대 등을 통해 정치적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통합 전대론에 대해 "일단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

총력 엄호 vs 낙마 총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 놓고 여야 연일 격돌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을 두고 여야가 연일 격돌하고 있다.

야당은 홍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 사과, 청와대 인사팀 문책을 요구했지만, 여당은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려고 총력 엄호에 나서고 있다. 여당은 위법은 없다며 방어막을 치면서도 홍 후보자에게 제기된 학벌지상주의 저서, 편법 증여 논란 등으로 민심이 돌아서는 것을 적잖이 경계하는 모습이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1일 홍 후보자의 행동을 가리켜 '내로남불'의 결정판이자 위선의 극치라며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달 31일 청와대 측이 홍 후보자 논란에 대해 "장모가 증여해주는데 안 받나", "(기자) 여러분도 쓰신 기사대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라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소개하며 "사과는 못할망정 적반하장식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홍 후보자의 자진 사퇴 요구에 동참하며, 거듭된 인사 실패에 대한 책임 규명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홍 후보자들 둘러싼 논란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도대체 청와대에는 인사추천과 검증팀이 존재는 하는가"라고 따져물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기간 준비된 대통령임을 자부했는데, 무엇을 준비했는가?"라며 "역대 정권 중 차관급 이상 공직자 낙마자가 7명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도 많다는 사실을 모르는가"라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비명문대 출신들은 소양이 없어서 중소기업 성공 못하겠다고 한 사람이 중소기업 육성 지원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청와대는 지명 철회하고 후보자는 자진사퇴해야한다"며 "대통령께서 공약한대로 인사추천 실명제에 따라 누가 홍 후보를 골랐는지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여당은 민심을 주시하면서도 불법이나 탈세는 전혀 없었다며 홍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을 해명하는 한편 역공을 펼치기도 했다. 쪼개기 증여라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선, 국세청조차 홈페이지를 통해 권장하는 '분할증여' 형태의 절세 방안이라고 감싸면서 한국당을 향해 '내로남불 비판하기 전 상속세 증여세 인상에 협조하라'고 날을 세웠다.

홍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대치전선은 예산 심사와 입법전쟁을 앞두고 기선 다툼 성격도 있어 오는 10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김동철 5·18 제보자 포상·신원보호 강화법 발의

5·18 당시 희생자 암매장과 발포명령, 헬기사격 등 5·18 핵심의혹 규명을 위해 제보자 신원보호를 확대하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일 5·18 진상규명에 기여한 제보자를 포상하고 가해자라도 제보에 동참하면 그 책임을 감면할 수 있게 해주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7월 10일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등 88명이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내용 중 5·18 관련 단체들이 보완을 요청한 사항들을 반영한 별도 법안이다.

특별법안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직권조사권· 출석요구권 등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검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위원들의 의결로서 공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별검사 수사 요청과 2년간의 활동기간 외에 필요하면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인정하고 진상규명에 협조하면 수사나 재판에서 처벌받지 않도록 하거나 감경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유죄로 인정된 경우에도 특별사면이나 복권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과거 국방부와 군 보안사 관련 기록이 날조된 사실이 밝혀진 데다 아직도 많은 5·18 관련 군 기록이 기밀로 묶여 있어 가해자를 포함한 제보자들의 증언이 진상규명의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특별법이 통과돼 완전한 의미의 5·18 진상규명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